



**종계업 위기
근본 치유책은 없는가.**

금일의 종계업 위기는 지난 '94년, '95년의 무더위 피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몇년 전부터 경기침체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육계농가나 산란실용계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병아리 값이 싸도 입추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생산비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여 왔기에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적자경영을 계속해 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상실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특히 육용 종계업자들의 어려움이란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계업식은 꾸준히 적정량 이상을 유지하는 기현상을 보여 소비감소에 맞는 생산조절이 어려웠다고 보여지는데 쉽게 포기할 마음들은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계열주체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생산량을 감축하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마저 일부에서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생산조절을 하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종계는 실용계로 볼 때 분명히 종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원종계든, 종계든 속성상 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적잖은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어려움이 닥쳐 일시에 종계업자가 도산하여 병아리 생산량이 절대적

으로 부족해지면 끝까지 살아남은 몇몇 종계장을 위시해서 다른 자본이 유입되어 공급기반을 늘려나가는 것은 농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이치일런지는 모르지만 복구될 때까지 실용계 농장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만큼 커지게 된다. 자칫 종계업이 무너지면 실용계 농장까지 줄줄이 연쇄도산의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대로 종계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속히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되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추어 과잉이 된 것이 문제인만큼 자금을 지원받는 종계장은 원칙을 정해서 생산 감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종계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 시장경제원리가 모든 분야에서 유행처럼 시행이 된다고 해서 종계업에 무조건 도입한다면 힘이 엇비슷한 농가들이 많아 갈데까지 가보지는 식으로 버티다가 병아리 값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일시에 도산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농민이 바뀌어 종계업은 지속된다고 해도 실용계농장의 고통과 그간 쌓아온 기술은 바뀐만큼 사장된다고 볼 때 엄청난 손실이 초래됨을 다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축산경영자금 지원과 양계산업 구조조정

양계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

대개 유통업자들을 통해 소비가 20~30%씩 줄었다는 풍문을 듣고 그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계업도 당연히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도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지원하던 각종 시설개선자금을 중단하고 양축자금을 지난해부터 축산경영자금으로 이름을 바꾸어 시설투자보다는 기 시설된 양계농장의 경영을 합리화 해나가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영세부업농 위주의 소액분산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판단하여 앞으로는 전업농 위주로 지원을 하기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시설지원자금이 수입개방에 대비해 농가의 사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좋았지만 결과는 신규농가만 양산하여 생산과잉이 되고 보니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정책자금을 시발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커녕 도산하겠으니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야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자기모순에 농가들을 빠뜨릴 위험이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는 IMF시대에서 이제부터는 기술, 자본, 영업전략에 따라 농가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필요성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규모가 작다고 경쟁력이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영세농가들이 부지런히 닭을 키워 규모화도 이루고 경영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해가는 정책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규모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차입경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경영자금만 지

원한다면 과잉생산의 결과로 모두가 부실해지는 양계농가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양계업 경영평가 현실에 맞게 기준을 세우자.

환율이 급등하여 수입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은행금리가 경총뛰자 양계업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리스 상환금, 사료가격, 기름값, 약품구입에 이르기까지 종전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해 양계업자들은 8할 이상이 적자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래도 원칙에 따라 세금은 내야 된다는 강한 어조 앞에 양계업자들은 항변할 길이 없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양계업은 개인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육계와 계란 등을 판매한 총금액에서 소득표준율에 따라 순소득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적자냐, 흑자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당해 연도 업종별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표준율을 정하는데 이때 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현실적이지 못함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자료가 없는게 문제이다.

현재 축협에서 육계와 계란에 대한 생산비를 조사, 분석하고 수익성까지 산출해내고 있으나 자기자본구성비를 규모에 관계없이 95% 이상으로 하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범주안에 들어가는 농가들은 계산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지간한 시

설자동화를 한 양계장들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 자체를 거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유통을 들여다보자. 고시가는 있으나 계란은 10~20원까지, 육계는 100~200원까지 낮게 출하를 하는데도 마치 현금으로 고시가를 전부 수취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소득을 추산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 수치대로 계란과 육계를 팔았다면 양계농가는 굳이 소득표준율을 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며, 소득이 발생한만큼 소득세도 납부할 것이다.

억울하면 고시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내리면 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유통상 이는 양계업자들의 오랜 희망사항에 불과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는한 좋은 섹든 따라야 할 입장이다. 다행히 법인이기업이 늘어나 장부를 보면서 점점 세무공무원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겠지만 금년과 같이 경제난이 온다든지, 사료는 현금을 주고, 시설은 리스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하고 산물출하는 외상으로 하여 금융손실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런 어려운 현실을 정부나 소비자에게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경영분석이 되지 않고 있어 매번 양계업자는 돈을 벌어 암살만 피우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럴 때 자조금이라도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규모별, 자본비율에 따라 생산비가 정확히 산출이 되어야 소득 또는 순수익에 대한 결과가 나오도록 전문 연구기관에 양계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의뢰하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 입장임을 감안해 금년부터 경영자금을 지원받는 농가들이라도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해나가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에 맞게 장부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계**